

제346회국회
(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28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 1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김영우 위원장님의 모친께서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장님과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국방부가 지난 2012년에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안보의 위기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 협력체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양국 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이른바 밀실추진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시로 도발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에 대한 방어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의 회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고 예산안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취지로 오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부의 현안보고와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인물은 2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 여부를 북한의 4·5차 핵실험 상황에 직면하여 관계부처 간에 검토해 왔으며 어제 논의 재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능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선별적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여타 수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필요로 우리가 먼저 일본 측에 제의를 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에 양국 국방장관이 추진에 합의한 바 있고, 당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안 협의를 마쳤으나 밀실추진 논란을 야기하여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에는

힘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논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정이 어려움에 있지만 국방부장관님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어젠다로 해야 될 일을 챙겨 나가시는 모습에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와 좀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연간 훈련계획을 따지면 지금부터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미측과 여러 가지 시간도 좀 필요한 일이라서 우리가 차분하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여러 가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의미 있는 일정을 또 훈련계획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정보교류 협정 재개에 대해서 오늘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를 하기로 한 시점이 일부에서는 SCM을 갔다 와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9월 20일 또 그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검토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SCM에서 이 문제를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4차 핵실험이 1월에 있었고 또 그 이후에 5차 핵실험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온 것입니다. SCM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이 결심도 지금 주무부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고록 논쟁에 있어서도 과거 NSC 할 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다니까 주무부처에 대한 역할,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 지금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에 있어서 주무부처는 저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사적 필요성과 추진의 어떤 결심, 모든 것은 국방부장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부분에 국방부장관이 궁극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백승주 위원 NSC에서도 국방부장관 입장이 반영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이 한일 정보협정과 관련하여 조금 앞서서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 TISA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본 위원이 차관일 때 그 정보교류 협정 서명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TISA를 서명할 때도 2014년 12월 29일로 압니다만, 그 당시에 TISA가 체결되면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 TISA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에 의거해서 금년도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이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의 정보공유가 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이 잘 운영된다면 지금 한일 정보교류 협정은 어떤 점을 보완한다는 거지요, 군사적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TISA의 경우에는 미국을 경유해서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협정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의 추가적인 군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TISA가 잘 운영되면 사실 이걸 체결할 필요가 적어지는 부분인데 TISA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찾아 본 미국 측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투명성과 여론 반영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50분 전에 서명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협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협의를 시작하고 투명하게,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갖고 타임플랜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회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회의 여론들을 반영해서 타임플랜을 아주 길게 잡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일측과 협의해 가면서 국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또 여론도 듣고 이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예.

중국과도 정보교류 협정을 제안한 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과 이미 2012년에 우리가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도 재차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의를 시작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진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조체계와 기체결한 협정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국방위 회의가 갑작스럽게 잡혔지요. 갑작스럽게 잡히고 오늘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것은 지금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방적인 추진으로 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1시간 전에 철회함으로써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과연 한일 정보협정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인가? 북핵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이고 또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놓아야 할 대안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알고 계시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12년도 논란이 됐을 만큼, 지금 한편으로는 대북 상황 속에서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이 있고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한일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쪽 대북 문제를 걱정하면서 뒷마당을 다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이 상태대로 합법적으로 앞마당까지 다 내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성노예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아픈,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조차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황을 보면서 일본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본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안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부 튼튼하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과……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서 최대한 더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뜬금없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내놓는다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사실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계속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방부의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드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 이야기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논란이 되면서 대국민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내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연 야당에게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국회에는 어떤 노력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국정 상황에서 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드 때도 그렇고 중국의 걱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좀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9월 초에 이 자체가 논의되고 있으면서 결국 어제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오늘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국방위원회조차 갑작스럽게 소집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어제도 들었고 듣고 나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일만큼은, 무기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긴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중요한 무기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얘기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왜 긴 계획 속에서 준비되면서 보고되고 이야기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되는지 이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 보고 이분 저분 이야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찌자는 거지요? 옛날에도 내부 혼란 때문에 일본 끌어들였고 청나라 끌어들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국민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방부의, 나라의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갑자기 어제 공식적으로 재개되고 9월 초에 얘기되는데 국방부의 긴 계획이었는데, 아니면 다른 입김들이 있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최순실 씨 비선실세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것이 오버랩되는 것이 세간의 이야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앞부분에 대한 제 질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우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가 89년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사안이고 작금에 이르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토의를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라들과 할 때 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적 감정으로서는 우리가 참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발표하고 여론의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나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과 대화할 때마다 지금 저 답변의 진실성, 진정성을 과연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데 항상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2~3일 만에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정에 없는 상임위를 소집할 만큼 과연 이 문제가 급박한 것인가, 또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개입한 것인가, 어떤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것인가, 항상 저는 혼란스럽고 지금 오늘의 이 대화도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결정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석연치 않은 협정, 사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 전혀 그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고 장관님 답변에서도 연내 체결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문안을 들고 올해 안으로 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한 장관님 본인의 결정이고 진짜 본인이 주도해서 이런 결정을 이뤄서 가져온 것인지 그 배경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드 배치 때부터 사실상 이제 와서 보면 정해진 수순이요, 계산된 행보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해 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약 한 달이 못 된 시점인 8월 2일에 KIDA 조찬포럼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언급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외부 다국적 국가들과도 정보공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측면도 있고 정책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말하자면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임무는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언론에 부각 안 된 더 중요한 발언도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이지스, 패트리엇 체계도 한국에 증강이 되고 이게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연합작전의 범위가, 공동작전의 범위가 한미일로 확대된다는 것도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한미일 간의 공통작전상황도(COP)와 교전규칙까지 공유하게 되는 이런 미사일 방어의 공동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던 말이지요.

이 말은 언론에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사드 배치에서 정보 공조로, 정보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아가는 하나의 마스터플랜, 자기들의 어떤 청사진이 있다는 걸 미국은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드 배치했으니까 이것을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의 공조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드 배치 있고 나 가지고 얼마 후에 이 정보공유약정이 국회에서 협정으로 돌변하는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군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진즉 예측했었어야 됩니다.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하도 천연덕스럽게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국방부에 잠시 제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위안부 문제 비롯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 정부에 사과한 적이 없는 아베 정부에 이제는 군사적인 북한 핵·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 손을 내밀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비루한 국가인가, 이제는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 밖에 안 되는가.

사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국가 생존의 새로운 공식을 내와야 됩니다.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민족적 자존감을 강화해서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는 게 우리의 생존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일본의 군사정보, 위성 몇 개 더 갖고 있다고, 이지스함 몇 개 더 갖고 있다고, 해상초계기 좀 더 갖고 있다고 그 정보가 우리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협정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국회에 와 가지고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는 이런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에게 이익인가,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한 일본에게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우리의 중요한 양보이자 배려입니다. 그것이 1936년에 이시하라 간지가 만든 국방정책 대강에서 첫 줄에 나오는 얘기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이게 바로 대동아공영권 사상으로 연결이 됐고 지금의 아베는 전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더 이상 굴욕적 평화는 싫다, 주변국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면서 아시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며 필생의 자기의 총리의 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게 군사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런 일본의 실체가 과연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세력입니까?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까요? 단순한 군사적인 공백 하나를 가지고 큰 국가적인 전략의 숨은 뜻을 읽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하나씩 슬슬 양보해 주면 정보의 공조는 필연적으로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정보의 공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가전략이 통합되는 거고 작전이 통합되는 거고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뭘니까, 우리의 자존감? 그렇게 능력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장관님도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걸로 봅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 어쨌든 사드 문제에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히는 것 국민이 한 번 당하는 걸로 족합니다. 이제 이 문제까지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회 동의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분쇄시킬 겁니다. 국민들이 누구

편인가는 이제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중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국방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단든지 또는 이것이 미사일 방어하고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러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정보공유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그 나라와 작전의 공조 내지는 무슨 특정 미사일 방어의 공조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경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협조할 부분,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저희들 업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김중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잠깐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가피한 일로 보충질의할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2분만 더 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5분만 더……

장관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단어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단어가 맞느냐고……

○김중로 위원 예, 제목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위원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호’가 맞습니까? 차라리 ‘공유’나 ‘교류’가 맞을 것 같은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협정을 맺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김중로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비밀보호협정이라고 통상적으로 그게 다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게 좀 이상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와서 그런지 이게 뜻이 맞는 건지, 저는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보호협정 같으면 이걸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법무관리관 오셨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김중로 위원 일어서세요, 안 보이니까.

이 문제가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의 어떤 국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된다고……

○김중로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 듣고 싶고, 이 정보야말로 안전보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있습니다. 작전하는 데 정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김중로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제가 헌법 60조에 들어 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비준 가야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중로 위원 아니, 예스다 노만 얘기해요, 애매모호한 얘기 하지 말고.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거기에는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김중로 위원 잘못 대답하면 위증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김중로 위원 알았어요.

장관님, 정보가 미국도 그렇게 한미동맹 한미

동맹하고 가깝지만 국익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국익을 먼저 생각해서 아는 정보도 역정보도 줄 수 있고 정보도 다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상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일본과의 우리 관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역사 왜곡 문제, 한 번도 우리나라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가까우면서 적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통일을 위해서 가상적 중에 제일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고 줄 것인지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보호든 교류든 공유든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협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

○국방부장관 한민구 ‘보호’란 용어를 쓰는 것은 이게 방법, 보호, 관리 중에서 보호가 되지 않으면 정보교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키워드로 나와서 보호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는 필요한 것만 필요한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글썄, 그 내용이 하여튼 저도 군대생활을 오래했지만 작전에 과연 필요한 정보를 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이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맺으면 아마 미국에서 또 다시, 이것도 미국하고 연관이 되는데 MD 체계를 저희가 들어가는 형세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을 할 것이 사실인데 물론 그 하나하나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미국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또 줘요, 사드처럼.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발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아마 끝나고 나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또 물품용역 상호제공 협정도 강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틀림없이 병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 일본에서 다 물자를 지원하고 병역도 다 들어올 텐데 이것도 지금 문제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한다면 MD 체계를 상당부분 다 수용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다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냥 있겠느냐. 그러면 3 대 3의 동북아 안보 형세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우려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MD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위원 장관님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드를 접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 전문가도 가서 분석도 없고 미국의 말만 듣고…… 지금 미국이 돈 들여서 갖다 놓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라면 사드가 공격무기인지 방어무기인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건지. 도 대체가, 이 사드 문제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비역 장군이면서도.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까, 장관님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정보, 영상정보를 다 저희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주겠어요, 제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미국마저도 우리하고 한미동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인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정보입니다. 그대로 주면 바보지요. 그런데 이 제목부터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번에 이렇게 국가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날짜를 잡고, 연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12월 달에 아베 만나서 3자 회담을 중국하고 한국, 그때를 초점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정서가 아직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과연 이걸 해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정말 우리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비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심

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신중하게 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로서는 이것이, 정보협력이 일본과는 필요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님은 MD 체계에 안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의 입장이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드하고 연결해 보면 다 MD 체계로 거의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걸 그렇게 저희가 동북아의 안보진영을 바꿔 가면서까지 국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반신반의가 가요. 어쨌든 저희도 국익 차원에서 사드도 반대하는 거거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 정보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드도 배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러나 총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사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수십조는 손해 봤을 겁니다.

제가 연거푸 말씀드렸지만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 1.5~2조 원이면 ER, 업그레이드된 사드가 18년에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3개만 사온다면 우리나라 동서남북 다 도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무기라면, 그렇잖아요? 20조면 완전히,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손해 본 게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런 장사를 왜 국가가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군인들 또 특히 장군분들 전부…… 저도 장군이지만 전부 다 사드, 핵무기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들 해요. 제가 반대하니까 속된 말로 죽일 놈 되고 있는데 저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드를 들여오고 이러는 것은 정말 총체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결정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정보보호도 왜 이렇게 시급하게 몰아붙여요, 군사 작전하듯이?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장관님의 합리적인 평서 사고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저 같으면, 정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드가 문제가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라도 건의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군 선배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고, 한번 더

고고도에서 방어해 주니까 좋고, 진짜 방어무기라면. 저는 지금도 방어무기인지 확신이 안 가요. 미국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접근해서 그것에 대한 효용성 따져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록히드에서 시작해서 그게 됐다는 얘기들도 아주 유력하게 들려와요.

물론 국제 관계가 강대국 정치이고 힘 있는 정치의 논리이지만 그런 속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해 갈지 정말…… 이제 저희 세계 10위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조건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원자력협정, NPT 조약을 전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왔어요. 국가가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국가가 아닌 것이 국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 21세기 돼서 우리가 10위권에 왔으면 국가 전체적인 개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비정상인 지금 난무합니다, 전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님 국정운영 시스템이, 의사결정체가 무너진 지 오래 됐어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데 전부 생각은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조직도 정말 싸울 수 있는 조직이나, 미래전에 대비한 조직이어서 지금 40조가 이렇게 들어갔느냐, 제대로 그게 수혈이 되고 있는가. 장관님, 해·공군 전력 말씀 잘 하시던데 저는 빨리 그거 증강…… 4년인가 2년 후에는 공군하고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말 진지하게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국가나 국방조직이나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의 대전략 속에서, 국가 전략 속에서 국방 전략이 나오고 군사 전략이 나와서 이게 정말로 미래전 대비하고 통일 후 가상 적에 대비해서, 잠재적인 적이라고 그러지요. 과연 거기에 맞는 건지, 이것도 지금 정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민구 장관님 평서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중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관님 답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진정성 있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아마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정말 보호협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매뉴얼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시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조금하게 결정

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더 견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서군의 선배로서 또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충정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면,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모든 군사에 관한 일이 국가 대전략,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군은 대전략으로부터 작전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운용되는 조직이고 또 주기적으로 그것을 갱신해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하게 보시는 만큼 그런 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을 저희들은 다 확인을 하고 하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니까 방어무기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또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어무기인지 공격무기인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또 MD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 MD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미사일의 생산, 배치, 교육훈련, 연습 또 양국 간의 어떤 협의에 관한 각서, 이런 모든 범주에 있어서 그런 협조를 하는 것을 M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미국이 구축하는 그런 MD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나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다 해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에서 노력해 오고 있고요.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라든지 또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도록 군사 기술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D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이 정보공유 협정도 우리가 필요만큼 주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상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정해진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 질의하고 제가 순서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꿨습시다.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김중로 위원님처럼 저렇게 특혜를 받고 싶지는 않고 한 3분만 더……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밀실 추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폐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때 국민 여론은 21세기판 을사늑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강경론까지 나왔었지요. 그걸 국방부가 4년 만에, 그것도 지금 정국이 어떤 정국입니까?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왜 시점에 이 정보보호협정을 다시 꺼내들었는지, 이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와대나 국방부 일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를 보위해야 할 국방의 문제까지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으려고 이 시점에서 이거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로 불과 20일 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또 9월 10일 날 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전화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의 요구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다뤄지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두 번째, 그러면 한민구 장관께서 국민의 이해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뭔가 행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어야 돼요. 또 일본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야 돼. 일본이 독도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된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한민구 장관은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어저께 NSC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추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게 실익이 워낙 시급하다, 이거 안하면 당장 북핵 위협에 노출된 우리 안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닌 것이 이미 한미일 간에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있고요. 또 북한과 일본에 관한 정보는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한미 간 정보 협력을 통해서 일본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요 장관은 아마 제 말에 대해서 정보는 다다익선이니깐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이 엄청난 시기에 내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것은, 우선 기술정보 영상 같은 것은—테크인트(TECHINT)는—일본이 이지스함이나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깐 그건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신호정보 감청, 시진트(SIGINT)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더 비교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탈북자 등 인적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우리가 절대우위에 있고, 급하

게 추진해서 정보보호협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지요, 일본. 우리의 휴민트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더 정확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깐. 문제의 사안이 이런데 이것을 왜 이 시기에 NSC를 열어 추진하려고 하는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거짓사과 해명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불을 뿜고 있어요. 도덕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이 아니고 정부 부처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를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논의를 정부 내에서 언제, 누가 처음 발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89년도부터 시작된 일이고 2012년도에 했다가……

○**김진표 위원**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이번에 어저께 그걸 발표하기 전에, 어저께 발표해야겠다고 할 때 그걸 처음 주장하고 시작한 사람이 청와대의 안보수석입니까, 장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4차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문제의 재개 필요성을 지나 또는 안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다 공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왜 국감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한마디 암시도 안 하고 갑자기 이 시기에 그걸 추진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과 재개하기로……

○**김진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답변을 주세요. 장관이 먼저 전화해서 외교안보수석보고 이것 해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교안보수석이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병우가 전화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왜 우병우가 여기에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김진표 위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평생을 군에서 종사하고 정말 유능한 엘리트 군사관료로서 인정을 받아 온 국방부장관께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지켜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혼돈에 빠질수록 적어도 총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하고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관료만큼은 대통령의 심기에 충성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기 위하여 의견 자중하고 무게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장관과 NSC에서 내놓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살리려고 아마 피를 낸 모양인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마음속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죽을 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북의 핵 위협이 워낙 가중되니까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어떤 외교적 조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사람들에게도 왜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되는 시기에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외교안보의 우리가 해야 할 자산을 나쁜 이미지로 덧칠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관해서 아주 좋은 충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무슨 잔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해서 재개할 필요성들은 느끼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개 지금쯤 시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떠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러한 의미를 던져 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 판단해 오던 일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이 비쳐질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하실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80년대 말부터 우리가 필요해서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렇게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우리가 얻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요청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이철규 위원**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필요한 쪽이 먼저 요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규 위원** 그때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능력이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능력 또는 분석능력을 월등히 상회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본의 정보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감시정찰에 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은 또 해양에서의 정보수집능력 이런 것들은 일본이 지금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일본이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정보수집 내지는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국의 정보능력은 다 보

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마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장비, 과학장비 내지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서, 이지스함이라든가 위성 이런 장비에 의한 정보수집능력은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적 정보활동에 의해 수집된 정보라든가 또 첨단에서 조금 뒤져 있다 하지만 통신의 감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우리가 일본보다 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정보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제 어차피 협상이 시작이 되면 서로, 그러니까 필요한 쪽이 아무래도 저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챙기고 짚어 봐야 할 부분이 소홀히 되고 또 그러한 소홀히 한 부분이 훗날 우리 국익에 손실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라든가 또 이외에 상임위 활동 때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어저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현출되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혹여 장관님께서 이번에 미국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게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지금 야당에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정의 어떤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걸 던진 게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앓는데, 혹여 미국이 주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포

함시키기 위해서 전초적인 작업으로 이런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저 자신도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요. 확실히 아니고, 오직 우리 군의 필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미국은 총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또 안보 협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수준이고.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이것이 저는 그 문제에 그렇게 순기능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면 혹여 군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좌절되고 했던 이런 협정의 체결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냥 슬쩍 넣어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없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이 군사적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래서 NSC 같은 회의체에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협정이 체결됐을 때 훗날 이 협정이 우리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온 지극히 잘못된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력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의 생명이 신속·정확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첩보, 팩트와 픽션이 완전히 혼재돼 있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정보력의 수준에 따라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 정보력이기 때문에, 정보력의 구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이 정보전력의 구축입니다.

한 국가가 이러한 정보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구축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이나 또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당사국 간에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전력,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이걸 또 우방국과 동맹국과 교류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중의 하나가 내가 갖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과의 어떤 안보 협력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종명 위원** 우리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또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한일 군사정보 협정까지 맺어야 되는가,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 측면의 가장 큰 실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은 미국 정보의 강점

이 있고 일본은 일본 정보의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속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한일 정보보호협정, 정보공유협정, 이걸 하게 되면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사정보협정으로 일본 군사력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군사정보를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일에 관한 협정일 뿐입니다.

○**이종명 위원** 또 하나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앞서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32개국 또 1개 국제기구와 지금 현재도 벌써 군사정보보호협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포함해서 11개국과 체결을 추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전에 러시아를 비롯한 32개국, 1개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받지 않았습니다.

○**이종명 위원** 왜 받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동의를 필요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명 위원** 앞으로 중국과, 어쩌면 우리하고 가장 민감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포함해서 11개국과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종명 위원** 가장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개념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사일 방어는 한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개념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일본과 우리가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하려고 처음 시도한 것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89년입니다.

○**이종명 위원** 미국 MD 개념과 우리가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 어느 게 먼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사일 방어가 먼저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명 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시도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이종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번 SCM에서 합의한, 한미일 3자 협력 증진이란 게 이번에 SCM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SCM을 할 때 또는 한미가 회의할 때 미측에서는 그러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종명 위원** 꼭 이번만 한미일 3자 협조 증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비이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장관님 답변 필요 없나요?

○**이종명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오늘은 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여러 견해에 이견도 있습니다만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이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오비이락이냐? 저는 그렇지 않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일본과 이런 정보협정을 맺으려는 것은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 금방 일본 아사히신문·니혼게이지신문에서도 미국이 영향을 줬다, 한국을 등 떠밀었다 이런 분석기사도 일본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국면 전환 카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광복군의 후손인 장관님께서 일본과 이런 결정을 급박하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 4차·5차 북한 핵실험 이후 9월 20일 이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12년도에 좌절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9월 20일 이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철희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논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9월 전에 말씀이십니까?

○**이철희 위원** 아까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9월 20일 전에 논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4차 핵실험부터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지금 날짜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이철희 위원** 내부 검토 안 하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이철희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9월 20일과 10월 6일 날 담당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았습시다. 보고받는 그 시점까지 일체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이 9월 20일 전에 논의가 있었다면 실무자가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이것 당연히 문책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자 말이 맞다면 장관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9월 20일 날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이철희 위원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날짜를 지금 9월 20일이라고 특징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아까 앞에서 말씀…… 답변하실 때 다 나왔던 얘기에요.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관님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라니까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철희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결정을 해서 NSC에 올린 게 아니라 NSC에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역으로 내려온 오더입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 전화로 통보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NSC 하루 전날. 그래서 실무자들이 전혀 검토 안 한 사안을 지금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에게 광복군 후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NSC에 올릴 거면…… 어제 8시 반부터 NSC가 있었잖아요. 저는 장관님이 안간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 전날 저와 상의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장관님께서 무리하게 지금 타이밍에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직접 참여해서 NSC를 설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관이 갔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지요. 이미 통보 받은 거니까 별 뜻 없이 그냥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NSC가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을 테니까 그 자료 초안은 국방부가 썼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가 자료를 NSC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자료는 국방부가 만들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정부가 만들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다음에 회의에서 나온 결과보고에서 추후조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다 결과보고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논의가 어제, 이번의 NSC 말고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결과보고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그 전에 NSC에서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실무자들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날짜를 제가 한번……

○이철희 위원 실무자 이름을 밝힐까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뭐 밝히시지 않아도……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왜 논의가 안 된 것을 자꾸 됐다 하시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날짜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다는……

○이철희 위원 핵실험 이후에…… 5차 핵실험이 9월 9일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 이후에 논의했다고, 처음에는 4차 핵실험이라고 그러셨고 5차 핵실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논의했다 하더라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온 게 10월 6일이에요. 제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2012년 이후로 한 번도 검토 안 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정보본부장이라는 분은 검토한 자료 갖고 오라니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래 놓고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할 거라고 보고 일찌감치 챙겼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NSC에 올린 자료 국회에다 보고하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자료라고 그것을 안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국방위와 국방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데 국회와 그걸 못 합니까? 그 자료를 못 줘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NSC에 올린 자료와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제가 장관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부탁 말씀 드리는데, 2012년에 이것 논의가 돼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둘째,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셋째,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밝힌 것입

니다만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이 세 원칙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장관님은 임명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대면보고를 못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장관님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면보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원칙을 지키시고.

저는 국방부가 다 떠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안보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것도 전화로 오더를 내립니까? 속된 말로 왜 설거지를 국방부가 다 하고 있습니까? 광복군의 후손이잖아요. 오로지 군사적 관점만 보신다고 하시는 분이면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대면보고 하시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번에 NSC 하기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날짜를 좀 확인해서 그 경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NSC에 저희들이 안 간 것은 그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거기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NSC 참석은 차관들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관계되는 사항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군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뒤에 계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군인이시고.

전투나 전쟁을 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고려요소 중의 하나가 때를 고르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기 위원** 어떤 시기를 고르는 시간……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기에, 장관님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는 적기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적기라고 생각을 하신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 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저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고민은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연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 협정을, 협상을 제기한다고 해서 오늘내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짧아도 연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결정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다 한다면, 참으로 저는 국방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오로지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국방부에서.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생각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정치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국방부에서 군인이 진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거꾸로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치적 감각과 정무적 감각까지 모두 포함해서도 지금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내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다고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예를 들면 이번 10월 말까지 안 된다면 이것은 건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화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1차 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몇 년 동안을 기다려도 괜찮은 것이었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하지 말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정말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니까 도저히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혹시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시기와 관련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비판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이 일을 주무하고 있는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점이, 이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벌어지려면 우리 국방위원회와 외교 통일위원회 정도의 위원들에게만은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비공개라도 논의하고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리고 이게 1차 무산된 이후 2차, 다시 진행할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병기 위원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어서 한일 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근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변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면 금년도에 북핵·미사일 위협 상황이 고조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칼럼으로 실리거나 또 우리가 자문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얻어진 것으로 봅니다.

○김병기 위원 이 시기는 별론으로 하고, 저도 이철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보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정보보호협정…… 정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협정을 하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병기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실익이 있다고,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 저희가 더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더 있는 것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고요.

○김병기 위원 그럼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발 장관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합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당당하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을 또 들으셔야 되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MD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예,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장관님, 제가 답변 중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알기로 80년대에 처음 제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요청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먼저 요청한 거지요? 그것을 뒤섞어 버리시면 안 돼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먼저 요청한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일본이 적극적인 입장……

○위원장대리 이철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꾸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팩트를 약간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래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대리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나라와의 군사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도 이 보호라는 용어를 쓰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경대수 위원** 지난번에도 이 보호라는 용어 때문에 한번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보호가 굳이 문제가 된다면 교류협정으로 바뀌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가요? 꼭 보호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교환하는 방법 또 보호의 책임,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보호가 되어야 서로 교류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의 핵심어로 이것을 쓴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경대수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교류잖아요, 교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10월 20일에 개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좀 보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국방부에서 전달해 와서 10월 25일 날에 여기서 전체회의가 열려서 저희들이 현안보고를 받고 장관님이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한 게 아니라 4차 핵실험 이후에 쭉, 또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장관님 말씀 취지, 행간을 읽어 보면 더 급박하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내부 논의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다른 의도,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니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국과의 안보협 의에 의해서 미국에 등 떠밀려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25일 전체회의 때 이 건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때 왜 안 해 주셨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 사항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10월 25일 바로 이 전체회의가 열리던 날, 미국의 정보국장인가요? 정보국장이지요? 국가정보국장 클래퍼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비핵화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미국 정보국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한테 미국 측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협의체도 하자고 그러면서 핵 전력의 상시배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한과 어깨너머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과거에 역사 문제로 일본과 우리가 좀 싫은 부분이 있고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국방부나 또 다른 정보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의 그와 같은 발표는 그와 같은 기대에는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당연히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말씀을 드리는 김에 이 국가정보국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발언을 해 놓고 ‘사건이다’ 이리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건이구나’ 이리라고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정보국장이 북한의 핵을 현실로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의 자위수단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그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성의 관료들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는 제가 봐서는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 말을 꼭 신뢰해야 될까……

어제인가요?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무수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최근에 두 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본토를 노리는 그와 같은 미사일, ICBM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은 되돌릴 수 없구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북핵을 동결하기 위한 군불을 때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의 어떤 자위적 수단 또는 역량을 키우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무수단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것은 한미 정보 당국이 무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말이 기니까 협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우려가 돼서 지난 6월 임시국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어요. 2월에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하더니, 지난 4월에는 청와대에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지난 9월에는 외교부 장관이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적 필요성은 인식한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여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국민적 동의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장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2주만에

그렇게 상황이 됐고 국민적 동의를 있다고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주시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적 동의라든지 지지 또는 이해 이런 사항들은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는 이런 논의 재개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제 예결위장에 장관님께서 하루 종일 계셨지만 어제 위원들께서, 상당수의 위원들이 무신불립을 이야기했잖아요. 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신뢰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왜 이렇게 만날 말을 바꿨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총리나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드의 최적지라고 그랬잖아요, 성주가. 사드의 최적지, 모든 것을 다 검토했더니 성주가 최적지다, 그런데 최적지가 바뀌었어요.

개헌, 대통령부터 ‘개헌은 블랙홀이니까 안 한다’, 총리도 ‘절대 무슨 개헌이냐’, 부총리도 ‘경제에 악영향이다’…… 결국 개헌하잖아요. 이제 또 개헌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정부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하고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군사협정을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침략을 해 놓고도 그 침략에 대해서 사과커녕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 우리 영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잠재적 적국이지요, 잠재적 적국.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물론 현 상태만 놓고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협정은 일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됩니까? 전쟁하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그 전쟁을 어디에서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합니까, 어디 뭐 중남미에서 합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면 동북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북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 일본에게 전쟁의 길을 터 줘 가지고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협정 체결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은 군수지원협정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뻔할 뻔자예요. 그리고 미국이 강력히 그것을, 일본의 주장을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이번에 SCM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왔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시다.

○김동철 위원 그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국을…… 이것 어떻게 여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군수지원협정도, 미국도 원하는 거고 일본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수지원협정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 함정 그리고 전투기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지원협정에 의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헌법에 의해서 자위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 일본이 한국의 헌법 규정을 보면서 한국에 파병 여부 결정합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수지원협정이 맺어지면 그 군수지원협정을 근거로 해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오는 거지 한국의 국회의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일본하고 협정 맺으면 그 협정에 근거해서 일본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이제 장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에서의 대결 구도,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의 강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의 협력 필요성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어떤 지역 블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물론 그런 뜻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은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마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지역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국가전략 또 외교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1분 주시면 질의하지 않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1분 더 드리시지요.

○김동철 위원 한국전쟁 때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동철 위원 모든 군수지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 지원해 가지고 전후 일본이 가장 쉽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설령 중국과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국지전, 일본과 중국 간의 국지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본 땅에서 일어납니까? 중국 땅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빌미를 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거고 일본은 피해 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말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동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한 3분 더 하셨는데 2분 더 드릴까요?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그만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관 답변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이 자리에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민족정신 그리고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 이런 데 기초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그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의 그러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주시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더 참고하고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특별히 질의를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중간중간 자리는 비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일본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은 그런 국민 중의 한 사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위 투명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가 아니면 오히려 일본을 돕는 그런 우리 국익에 반하는 협정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보와 관련해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북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다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반대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희 간사, 경대수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서 협정을 체결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작금의 나라 안팎 상황이 정말 어렵고, 사실은 걱정되는 게 사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 이러한 협정 체결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남남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가면서, 동의를 안 받는 것과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저는 차원이 틀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상호 이해하는 속에서 이 협정이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충언과 고견을 아주 새겨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분……

그러면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동료 위원들 질문에 대한 장관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일본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오늘 보고 문서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최근에 일본의 요구도 있었지만 답변서에도 ‘공감’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적 필요, 특히 4·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그대로 속기록을 뒤져서 읽어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일본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했다 이

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최초에 우리 한국이 제의를 했는데 일본이 별 반응을 안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일본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89년에 우리가 제의하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이 일본도 아주 직접적인 위협으로 등장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양국이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답변하고 조금 전의 답변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의 답변 내용은 최근에 한일 정보교류 협정에 대해서 일본의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한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일 정보교류 협정은 최근에 다시 재개를 결정했지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한일 차관회담을 할 때도 항상 의제였습니다. 그때마다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쪽 해 왔던 사안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됐다기보다는 12년 이후, 89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장관님이 앞선 질문에 할 때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필요성을 판단해서 NSC에 상정을 했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승주 위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정보교류 협정이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체결됐는데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이 특히 일본과

의 교류협정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일 정보교류 협정의 필요성이 다시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장관님이 내부적으로 정보교류 협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미국 측에 이것을 쪽 조사를 해 보니까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이 그림만 그럴싸했지 내용이 잘 안 되더라 이런 판단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저도 1분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2개국과 또 1개 기관과 이미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한일 간에 군사정보교류 협정이 체결되면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콘텐츠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내용이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이게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마는, 또 일본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같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그 차이점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하고 다른 저 유럽의 국가들하고의 정보교류 협정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별성도 있어야 될뿐더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보교류 협정의 체결이 미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교류 협정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그런 것도 보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정보 TISA를 체결할 때도 4월 달에 제기해서 일곱 달이 걸렸어요, 그것을 조정하는 데.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까지 고려해서 투명하게, 저는 이 문제는 안보·국방 차원에서 가야 될 문제 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건들, 조건들을 같이 다루어 가면서 투명하게 추진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 아픔이 있고 현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미래를 보고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까요?

당시 외교부의 밀실협상의 결과 일본이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10억 엔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했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가역적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사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합의가 미래를 위한 합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울분을 갖고 집착하게 만든 합의는 아닌가,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합의가 이번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재작년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과정도 매우 석연치가 않습니다.

당시에 3국의 차관이 만나서 조인식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서명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지요? 그렇게 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제 문서를 회람시키는 형태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택배기사 하나 와서 서명받아 가듯이…… 저는 어디 언론에 가서 이걸 택배기사협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3국의 차관들이 모여서 조인식을 하기로 한 것을 그렇게 회람하고 간략한 절차로 끝내 버린 그 이유는 뭘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좀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만나는 일정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

니다.

○**김종대 위원** 속사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일정 때문이라면 한 해를 넘겨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당시에 12월에 체결됐지요, 재작년 12월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당시에 꼭 연내에 체결해야 했던 이유가 뭘니까? 3국의 차관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 아니에요, 1월이나 2월이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월로 당겨 가지고 그것도 하급관리 하나가 서명 죽 받아가는 이런 모양으로 된 이유가 뭘니까? 이걸 상당히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인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3국이 내부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다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회에 와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그 과정도 따져볼 여지가 많지만 지금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교류하는 하나의 대문을 연 겁니다. 이것은 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정보교류 협정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어떤 문을 따준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대문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정 문안에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가 않을 터인데 그러면 이제 한일 간에 교류해야 되는 정보의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일반적인 분야로 더 확대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가 덧붙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괄적인 규정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따로 명기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목에서 군사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이 협정에는 없을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위원** 여기도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정보라고 우리가 제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더 추가될 수 있다, 군사정보니까, 그렇게……

○**김종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 거든요. 지금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주로 우리는 정보본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수집된 기계정보나 기술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하면 그 운용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보의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정보 사용자는 주로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니까 정보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하고 또 우리 관련되는 기관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것은 사실 따지지도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다음 전체회의에서 또 한번 따져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서면으로 질문하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이 문제는 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말씀 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하시겠어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안보라는 돌다리도 백번이라도 두들겨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사주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러시

아와도 2001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십오육 년 전에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리에게 지금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용들을, 지난 12년도 추진 당시의 협정 문안들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정 체결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일본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협정 체결 과정에서 토의되었지만 공유되는 정보는 보호가 원칙인데 보호되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또 제3국에 제공된다든가 하는 정보보호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 정보보호의 책임이 서로 양국 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협정을 체결하는 각국 간의 어떤 관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보호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데도 하여튼 일본과의 체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2012년도에 체결하려고 했던 협정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안보에 상당한 실익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도 2001년도에 체결했고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저기 멀리 있는 남미 국가들과도 체결한 협정을 왜 유독 일본과 체결하는 데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역사적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종명 위원** 역사적인 경험에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북한 변수가 대단히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북한의 변수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먼트 수집 활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최근의 어떤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정보협력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이탈했는데 우리 정보능력으로는 그걸 다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국과의 정보 협력은 필수적인데 최근 우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라든가 미사일 또 SLBM 이런 공통의 안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국민 감정 때문에 또 정치논리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그 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국익을 위한 추진이라는 어떤 공감대를 국민들한테 형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상당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감정과 병행해서 국익과 또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정보다 이성적인 지혜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현안도 있습니다.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든지…… SLBM은 사실 일본은 해양력이 우리보다 더, 해군력이 실제 장비나 감시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서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정을 맺고 또 앞으로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운용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뒤에 계시는 합참의 김선욱 전략정보부장이 저한테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많이 잘 이해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설명과 상관없이 이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에 서명 직전에 깨지고 나서, 보류되고 나서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금기어였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논의 안 하는 게 암묵적 합의였던 것이고 이 물꼬가 금년 9월 와서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2016년 9월 11일자를 보면 9월 10일에 일본 방위상이 우리 장관님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고 장관님은 국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향을 보였다 이렇게 답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는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자, 하자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는 2012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했던 게 팩트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금년 9월 대통령과 아베 일본수상이, 총리가 만나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이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9월 10일 날 연합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사이에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장관님은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곡하게 거절해 온 게 지금의 기조였는데 그게 다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아까 4차 핵실험인가, 5차 핵실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검토가 되었다면 5차 핵실험 이후에 당장 국회 상임위 열렸을 때 이 방안이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야 온 타임(on time)이잖아요. 아주 적절하잖아요.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이랑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 설득하기에도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경대수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25일 날 상임위가 있었는데도 일언반구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27일 날 NSC가 있었어요. 그러면 26일 날 이견이 다 해결이 된 것이냐? 그게 정부의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협정문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정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서 사인 직전까지 갔던 게 있고 말씀 들어보면 필요성도 다 공감했습니다. 무엇을 논의하는 게 남았는지 나

중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 주시고, 그게 26일 날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NSC와 국무위원 간담회가 일정이 겹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안보 문제를 다루는 NSC가 이렇게 소홀하게 그냥 국무위원 간담회랑 같이 시간 잡아 가지고 차관들이 대참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느냐 하면 이미 결론 난 것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안 가도 되는 것이지요. 이미 청와대에서 다 결론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NSC를 거치기 때문에 안 가서도 되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국무위원 간담회, 국무회의도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그 시간에 잡아서 거기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오해받지 마시고요.

지금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저희들이 목표 시한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니까……

○이철희 위원 아니, 11월로 정해 놓은 일정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목표 시한을 확정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간이……

○이철희 위원 대체로 그렇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일본 신문에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로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협정이 체결이 되면 대잠수함 작전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며 자위대가 한국 거주 일본인의 구출작전 시 필요한 공항과 도로 정보, 한국군의 전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것 맞습

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은 상당히 앞서 나간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협정도 안 되었는데……

○이철희 위원 앞서 나간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완전히 이걸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오보입니까?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인데……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예를 들면 공항과 도로 정보, 한국군의 전개 정보는 못 준다고 선을 그으시면 될 일을 왜 자꾸……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못 주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선을 그으세요, 그렇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못 주는 거지요? 이것은 오보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리고 저도 한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기왕에 협정을 맺은 문안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보고자료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에요. ‘군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에……

○이철희 위원 안에는 있어요, 안에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만들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12년도에, 최초에 ‘군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무부서를 외교부로 바꾸면서 ‘군사’를 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으려면 제목에서부터 군사로 한정을 해야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다 ‘군사’로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2012년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 장관님도 국회 답변 이럴 때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와 속된 말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여론조사 해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체결하는 쪽으로. 그렇다면 국회가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국방부하고 국방위 간에 TF팀 만들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서……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의논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 부분에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면 오해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희는 국방위 차원에서 또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방위도 비상설 소위라는 것을 만들 수 있으니 그 소위 위원 몇 명하고 국방부 몇 분하고 TF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결론 내면 저는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도 좋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TF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은 협의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철희 위원** 하나만 더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이철희 위원** 그것 검토해서 답변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2012년 4월 13일에 북한이 인공 위성인가요? 로켓 발사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20분 먼저 알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자산이 뛰어나고 정보가 좋다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 봐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정보수집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구공물을 감안해서도 북한에서 한 20~40km 정도 상승하면 우리가 잡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올라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잡는 것인데, 다만 일본은 위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감시자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서 ‘정보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방부가 좀 급급해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자부심 넘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TF팀을 구성하자, 이것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견을 나누어 보면 분명히 국방부가 방어하는 의견이 아니고 국방부가 원하는 의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외로 소통이 부족하다, 국방부가 국회와도 이 정도 소통이 부족할 정도면 국민과의 소통은 염려할 정도가 되겠지요.

미국과 일본과 함께 굳건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국방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서 저는 한미 군사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니 그게 지금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동북아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면 응당 해야지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듣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국방부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자극해서 동북아 평화체제 위협을 한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이 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와 보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미일 동맹 발전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데, 혹시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우리가 한일 동맹, 미일 동맹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한미일이 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님처럼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것을 또 굉장히 금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법적인 조

전 문 위 원	박	철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한	민
국 방 정 책 실 장	류	제	승
기 획 관 리 관	이	남	우
정 책 기 획 관	장	경	수
국 제 정 책 관	최	형	찬
법 무 관 리 관	노	수	철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	선	욱
국방정보본부			
정 보 기 획 부 장	이	영	철
해 외 정 보 부 차 장	이	진	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1. 신용현 · 권은희 · 김경진 · 김중로 · 박선숙 · 손금주 · 오세정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최경환(국) 의원 발의)

10월 2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이종명 · 이철규 · 박맹우 · 김세연 · 정갑윤 · 장석춘 · 이종배 · 홍문표 · 김선동 · 전희경 의원 발의)

이찬열 · 김영호 · 기동민 · 김현권 · 소병훈 · 조정식 · 이인영 · 제윤경 · 금태섭 · 김종훈 · 박완주 · 남인순 · 정춘숙 · 이학영 · 안호영 · 노웅래 · 추혜선 · 민병두 · 김영춘 · 김광수 · 서영교 · 전해숙 · 표창원 · 신창현 · 김경수 · 박주민 · 이재정 · 이정미 · 윤소하 · 김진표 · 이훈 · 김태년 · 한정애 · 홍익표 · 황희 · 윤호중 · 박경미 · 황주홍 · 김정우 · 심재권 · 김상희 · 박홍근 · 유동수 · 최명길 · 유성엽 · 추미애 · 정인화 · 전해철 · 윤영일 · 정재호 · 박찬대 · 손금주 · 이동섭 · 진영 · 강훈식 · 김민기 · 유승희 · 문희상 · 최인호 · 신경민 · 권칠승 · 전현희 · 양승조 · 박지원 · 백혜련 · 조배숙 · 강병원 · 이개호 · 우원식 · 이용주 · 박광온 · 이석현 · 심상정 · 김두관 · 고용진 · 김철민 · 박남춘 · 서형수 · 윤후덕 · 설훈 · 주승용 · 원혜영 · 김부겸 · 이상민 · 김수민 · 장정숙 · 정동영 · 최도자 · 박준영 · 최운열 · 김영주 · 이은권 · 강창일 · 오영훈 · 유은혜 · 안민석 · 전재수 · 손혜원 · 변재일 · 박주현 · 송기헌 · 도종환 · 김영진 · 김병기 · 박주선 · 김성식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이종명 · 김종태 · 송희경 · 金成泰 · 광대훈 · 박명재 · 장석춘 · 김성찬 · 김세연 · 정갑윤 · 윤종필 · 김선동 · 이종배 · 김학용 · 김성태 · 황영철 · 박성중 · 엄용수 · 경대수 · 김용태 · 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회부됨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2016. 10. 25. 위성곤 · 윤관석 · 박정 · 김종대 · 김현미 · 장병완 · 윤종오 · 인재근 · 채이배 · 권미혁 · 이상돈 · 조승래 · 안규백 · 안철수 · 권은희 · 신용현 · 김병욱 · 김해영 · 신동근 · 민홍철 · 이종걸 · 김종민 · 이언주 · 이용호 · 백재현 · 박병석 · 김경협 · 이춘석 · 김관영 · 오세정 · 박영선 · 최경환(국) · 이해찬 · 어기구 · 박선숙 · 황의락 · 진선미 · 김삼화 · 정성호 · 이상호 · 홍영표 · 노회찬 · 송영길 · 김경진 · 김중희 · 이용득 · 박범계 · 문미옥 · 김한정 · 오제세 · 박재호 · 송옥주 · 임종성 · 김병관 · 박용진 · 천정배 · 이철희 · 김성수 · 이원욱 ·